



安全性 強化에 注力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



발전소 현장에서 KINS 주재원이 각종 검사, 시험을 수행하고 있다.

지난 해는 문민정부 출범과 이에 의한 개혁의 시대적 추세에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이 적극적, 능동적으로 발맞추어 내부적으로 많은 운영개선점을 도출하고 새로운 도약의 기초를 다진 한해였다. 신임 원장의 취임과 함께 국민을 위해 원자력안전을 지키는 과수꾼이라는 기치를 내걸고 안전기술원이 규제전문기관으로서의 사명감을 다지는 데 진력하였을 뿐 아니라 안전기술원의 독립 청사진 설작업이 1995년 완공을 목표로 하여 착수되었다. 특히 러시아의 동해 핵폐기물투기사건이 발생하여 투기해역 및 동해 여러 지역에서 해양시료를 채취 분석하여 그 결과를 발표함으로써 국민들의 불안감을 해소시켜 준 것은 크게 의미있는 일이라고 할 수 있겠다.

국제적인 원자력 여건변화를 돌이켜 본다면 IAEA의 「원자력안전협약」이 5차 회의까지 개최되

어 협약적용범위 등에 대한 구체적인 쟁점들이 거의 타결됨으로써, 각국의 원자력시설의 안전문제를 해당국의 주권하에 관리하는 기본 전제하에 이를 국제적으로 점검하고 안전성 증진을 위하여 공동 노력하는 데 대한 국제적 합의가 거의 이루어 졌고, 지난 11월에는 런던협약 당사국회의에서 방방사성폐기물 해양투기 전면금지가 결정된 바 있다.

안전성 증진 노력 강화

국내적으로는 구포열차사고, 아시아나 항공기 추락사고 및 폐리호 침몰사고 등의 대형사고가 발생하여 많은 희생자를 냈으므로써 우리 국민의 안전 의식수준의 문제점 및 국가적 리스크관리정책의 문제점을 노정시켰고, 이에 따라 원자력관련시설

에서는 국민에게 충격을 안겨줄 안전관련사고가 결코 발생해서는 안된다는 확고한 인식으로 원자력안전관계자들이 긴장하였던 한 해이기도 하였다. 또한 원자력안전규제제도를 개선하기 위한 기본방침이 확정되었고, 이에 의거한 시행계획안이 만들어져서 여러 기관의 검토를 거치는 단계에 있다. 기관 내부적으로는 정부출연기관 중에서 최초로 외부전문기관에 의한 경영진단을 실시하여 기관운영개선을 위한 기초자료를 취득하였고, 부장책임제 도입 및 기존의 전문실개념으로부터 사업관리개념으로 기관업무방식을 전환하는 등의 운영개선 기본방침을 확정하였다. 연구개발사업으로는 G-7 프로젝트의 하나로서 신형로개발의 규제요건을 연구하는 대형과제가 수행되었다.

신년도 주요사업

기관 설립 4년째를 맞는 1994년도에는 연초에 기본 골격이 완성될 원자력안전규제제도 시행계획에 따라 원자력법 개정시안을 과기처와 함께 마련하여 9월 정기국회 통과를 목표로 작업을 추진할 것이다.

안전심사 업무

정부가 위탁한 안전심사업무로는 신규원전 인허가와 관련 영광 3, 4호기 운영허가심사, 영광 5, 6호기 건설허가심사, 월성 2, 3, 4호기 건설허가 후속심사, 울진 3, 4호기 건설허가 후속심사, 기타 각 호기별 부지 및 제한공사 후속심사가 수행될 것이다. 가동중 원전에 대해서는 특히 Westinghouse 핵연료 도입에 따른 안전성 심사와 호기별 확률론적 안전성 분석결과를 중심으로 공장증설에 대한 안전심사도 수행하고 가동중 원전 안전성 재평가 방안을 강구하여 운전 안전성 확보에 만전을 기할 계획이다.

안전검사 업무

안전검사업무로는 상업운전중인 9기의 원전에 대한 정기검사, 건설중인 7기의 원전의 각종 주요 설비와 부품에 대한 제작검사 및 사용전 검사와 함께 핵주기시설 및 인출작업은 월성 2, 3, 4호기 압력관 전선성 확보에 큰 단서를 제공한다는 측면에서 특히 중점 검사할 예정이다.

그리고 이용업체가 계속 증가추세에 있는 방사성동위원소 사용시설에 대해서도 엄격한 안전심사 및 검사를 통해 안전관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할 것이며, 포항공대의 대용량 방사광가속기에 대한 심사 및 방사선작업 종사자의 피폭관리에도 역점을 둘 예정이다.

국제네트워크 운영

이외에 IAEA의 핵사찰에 대한 지원, 원자력관련 면허시험관리 등도 신년의 주요사업 중의 하나이며, 전국 환경방사능 감시사업으로서 원자력시설주변의 환경감시 및 환경영향평가의 일환으로 지방대학과 협동으로 해양환경조사를 수행하고 전국 방사능측정소 운영과 함께 환경방사능 감시차량을 운영하며, 9개 지방측정소 및 울릉도, 백령도의 간이측정소 운영으로 환경방사능의 변동을 감시할 예정이다. 그리고 동해의 방사성폐기물투기와 관련하여 한, 러, 일 3국 공동 방사능조사를 수행할 것이며 원자력안전성 확보를 위한 국제 네트워크를 구성 운영할 예정이다.

연구개발사업

연구개발사업으로는 원자력안전규제기술의 선진국 수준화를 위한 차세대 원자로 규제기술개발작업을 계속 수행할 예정이며 직원들의 전문성 제고 및 자질향상을 목표로 기본연구과제를 전직원들이 수행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국제협력분야

국제협력분야에서는 IAEA 정기총회, 정기이사회 그리고 방사성폐기물관리 안전기준 상설위원회

에 참석하고, 국가간 협력사업으로서 제 12차 한·카 원자력공동조정위원회, 제 4, 5차 한·일원자력협의회 및 제 15, 16차 한·미 원자력공동상설위원회 등에 참석하며, 미국의 NRC가 주관하는 국제 배관전선 공동연구 및 국제 열수력코드 응용 및 관리에 대한 연구에 참여할 예정이다. 미국의 NRC와 일본 등지에 직원을 장기간 파견하여 그 지역의 원자력 안전체계 연구 및 각종 정보를 취득토록 할 것이다. 이렇게 원자력선진국과의 계속적으로 국제협력을 추진하는 외에 새로운 협력 대상으로 부각되고 있는 일본, 러시아, 중국과도 실질적인 협력을 증대시켜 나갈 예정이다.

기관조직강화

이와 함께 기관 내부적으로는 부장 책임하에 각 부의 업무를 사업관리체제로 전환, 시행할 예정이며 현행 직급체계를 재조정하며 검사 및 심사분야 전문가들에게 그 능력에 걸맞는 자격을 부여하는 직능자격제도를 도입할 예정이다. 실제 규제업무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규제관련분야의 R&D를 체계적으로 수행해 나가며 규제기술능력의 국제수준화를 위하여 원전 선진국의 규제전문가를 초청, 강도 높은 교육을 시행하고 외국어 구사능력 배양을 위해서도 어학 교육프로그램을 개발, 시행할 것이다.

규제전문기관으로서의 사명완수

우리 기관은 타 출연연구기관과는 분명히 다른 원자력 안전규제 전문기관으로서의 차별성을 염두에 두고 직원들의 의식을 규제 마인드로 충일케 하도록 여건을 조성할 예정이다. 즉 연구업무는 규제와 직접 관련이 되는 것을 수행하며 기술능력개발도 규제기술능력의 제고를 전제로 하여 수행토록 할 것이다.

규제절차의 정당성확보

또한 IAEA의 기본안전원칙에도 언급되어 있듯이 원자력안전규제는 그 독립성이 전제조건이 되고 있는 바, 제도상의 독립성은 이제 확보되었다고 보지만 규제요원들의 의식차원에서도 더욱 독립성을 확보하도록 하며, 규제현안에 대해서도 사업자의 용역수행방식으로 해결하는 것을 향후에도 엄격히 금지하여 사업자와의 연결의 고리를 끊고 규제절차의 정당성을 확보함으로써 규제과정 및 결과에 대해 제3자로부터 신뢰받는 규제업무를 수행할 것이다.

안전기술원은 또한 최고의 기술능력으로 무장하여 전문성을 확보하고 규제업무를 수행해 나갈 것이며 이를 위하여 IAEA 및 원자력 전선진국들과의 기술협력을 계속하고 다양한 국제 교육훈련프로그램에 능동적으로 참여하며 자체적인 교육 프로그램들을 마련 시행해 나갈 것이다.

국민의 편에서 규제기준 적용

그리고 규제기준의 적용에 있어서 국민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고려하여 충분한 안전여유도를 확보하고 기술적인 판단에 논란이 있을 시에는 국민의 편에 서서 보수적인 결정을 내림으로써 국민이 신뢰하고 납득할 수 있는 규제를 해 나갈 것이다. 이것은 사업자가 항상 그들의 입장을 규제기관에게 표명하고 그들의 요구사항 관철을 위해 조직적으로 접근하는 데 반해, 원자력재해로부터 보호받아야 할 국민들은 집단화가 어려운 속성상 규제자측에게 그들의 원자력안전에 대한 우려와 요구사항을 전달할 통로가 거의 막혀 있다는 점에서 특별히 역점을 둘 예정이다.

규제에 의한 사업추진 장애 최소화

하지만 규제업무수행에 있어서는 열린 마음으로 사업자와 대화하고 토의하여 최선의 결론을 내리도록 노력할 것이며 전문성 뿐만 아니라 건전한 상식과 합리적인 방법론에 근거하여 업무를 수행해 나갈 예정이다. 이를 위해 비용편익분석기법을

규제에 적용하는 방안을 연구할 예정이며 또한 규제가 사업자에게 미치는 영향에 대한 분석, 평가를 수행하여 향후 규제의 개선점을 도출하려고 한다. 그리고 국민들의 원자력안전규제에 대한 인식도를 외부전문기관에 의뢰, 조사하여 규제업무개선을 수행하고자 하며, 규제에 의한 사업추진의 장애를 합리적으로 최소화하고 예측할 수 있는 규제를 시행해 나가려고 한다.

규제업무 수행의 공개성

그리고 우리 기관은 규제업무 수행과정 및 그 결과를 국민들에게 공개하여 한 점의 의혹이 없도록 해 나갈 것이며 규제정책 결정과정에의 사업자의 참여 뿐 아니라 공익보호의 관점에서 국민들의 참여도 최대한 유도함으로써 명실공히 투명한 규제를 해 나갈 것이다. 이와 관련하여 새해에는 원전지역주민들에게 정기검사 등의 규제업무수행결과 발표회를 개최할 계획이며 원자력안전백서 또한 예년과 마찬가지로 발간할 계획이다.

기관운영방식 개선

다음으로 우리 기관은 업무수행에 있어 각종 비능률적인 요소를 제거하여 최고의 효율성을 가지고 규제업무가 수행될 수 있도록 기관운영방식을 혁신적으로 개선할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임금구조개선, 정년조정 및 명예퇴직제, 성과급제도 도입, 인사고과제도 및 직급체계 개선을 시행하며 각종 위원회를 정비하고 규정들을 개정하며 부서간의 벽을 허물기 위한 순환근무제도 등을 시행할 것이다. 현재 사회 각 분야에서 진행되고 있는 의식개혁운동과 품질향상운동을 우리 기관도 과감히 받아들여 규제업무의 품질을 향상시키고 관리자 교육을 강화하여 역동적인 KINS 조직문화를 창출하여 나가려고 한다.

안전문화 수준의 제고

이외에 원자력계 종사자들의 안전문화수준을 선

진국수준으로 제고하고 안전성에 대한 논의를 활성화, 체계화하기 위해 원자력안전을 다루는 「원자력안전(가칭)」이라는 전문지를 정기적으로 발간 할 예정이다. 또한 원자력규제정책을 국가원자력정책의 일부로서 인식하던 종전의 시각으로부터 탈피하여 정부규제인 사회적 규제의 하나로서 조망하는 새로운 인식이 원자력관계자들 사이에서 확산되도록 하며 규제전문기관의 엄격한 규제를 받으면서 건설 및 운전하는 것이 원자력의 국민적 신뢰획득의 선결요건이라는 인식을 갖게하는 이른바 발상의 전환을 이루도록 유도해 나가고자 한다.

또한 UR 이후 원자력산업의 시장개방에 대비, 국내의 원자력 안전규제요건을 합리적으로 보완, 정비하며 장차 있을 남북통일을 염두에 두고 북한의 원자력시설에 대한 안전성점검 등의 규제수요에 대비하는 연구에도 착수할 예정이다.

철저한 규제업무로 국민신뢰 회복

지금 우리는 국제적으로는 급변하는 세계정세 속에서 종래의 사고체계가 급격히 변화하는 것을 목도하고 있으며, 국가적으로도 개혁과 발상의 전환의 필요성에 직면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국내외의 원자력 여건도 우리에게 새로운 사고의 틀을 가질 것을 요구하고 있다.

이러한 여건 속에서 우리는 원자력안전규제전문 기관으로써 어떠한 규제철학을 가지고 국민을 위한 안전규제업무수행에 임하여야 할 것인가를 진지하게 생각하며 이러한 규제업무가 원자력시설의 주인인 국민에 대한 서비스라는 인식하에 우리의 의식과 업무형태 개선을 위해 부단히 체질개선을 해 나가려고 한다. 국민의 신뢰를 얻지 못하면 안전기술원은 존재할 이유가 없다는 점을 명심하고 우리에게 주어진 원자력안전규제업무 수행에 열과 성을 다할 것을 다짐한다.